

다산포럼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창작과비평' 명예편집인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다산 선생의 업적에 대한 인식이 점점 증대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 다산이나 실학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끈질기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흔하며 일부 언론의 적극적 응원을 받는 주장이 다산을 포함한 실학의 '근대성'이 과장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근대어말로 문명개화의 시대이고 실학이든 무엇이든 근대로의 전환을 얼마나 선도했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좌우된다는, 전형적인 근대주의적 주장이지요.

이에 대해 다산 선생이 비록 '근대적'은 아니었지만 충분히 '근대 지향적'이었다고 응수하는 것은 다소 공색한 변명으로 들리기 쉬우며 기본적으로 근대주의 사고의 틀, 이른바 저들의 '프레임'에 말려드는 일입니다. 다산이 당대의 적폐를 파헤치며 새로운 세상을 꿈꾼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근대를 지향했다는 것은 그의 사상을 외면하고 왜곡하는 결과가 되겠지요. 그는 당신의 표현으로(물론 유교 전통에 있는 표현입니다만) '도심(道心) 곧 수신을 통해

다산학과 '근대' 담론

살린 인간 본연의 착한 성품이 지배하는 세상을 꿈꾸었지, 수양 없는 무리들의 탐욕을 포함한 일상적 감정 곧 '인심(人心)을 예찬하며 심지어 작동의 원리로 삼는 자본주의 근대를 지향했을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물론 그의 사상에는 근대의 어떤 특징들을 선취하고 예비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요소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며 정확히 어느 정도로 오늘 우리의 근대 적응을 도와줄 수 있는지를 규명하는 것도 다산학의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제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는 다산사상이 도저히 근대 세계 체제와 양립할 수 없는 어떤 요소들을 지녔으며, 그러한 요소가 오늘날 무작정 이 체제에 순응만 하다가는 차별하게 마련인 현대 인류에게 어떤 활로를 열어 줄 수 있을지를 밝혀내는 일일 것입니다. 사실 그 두 가지 과제는 별개가 아닙니다. 극복 노력이 없는 적응만으로는 적응조차 결국 불가능하려니와, 적응은 안 하고 극복만 하려는 노력 역시 실효를 거두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마디 결론한다면, 다산이 근대를 지향하거나 선취했다고 말하면서 그가 지향한 근대는 자본주의적 근대와 본질적으로 상이한 '대안적 근대'임을 강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저는 이것이 두 가지 면에서 생산적인 담론이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자본주의적 근대 세계 체제가 이미 전 지구를 덮고 있는 세상에서 이 자본주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관건적인 질문을 회피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본주의를 그대로 둔 채 '대안적 근대'를 건설할 수 있다는 생

각은 일종의 자기기만이지요. 또한 '대안적 근대'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만으로 자본주의를 대체할 수 있다는 생각도 자본주의의 무서운 줄 모르는 순진한 발상이 아닐까 합니다.

둘째, 자본주의 이후의 세상을 상상하고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면 '근대'와 '현대'를 구별 못하는 영어 등 서구어 사용자들과 달리 '대안적 현대'라는 말을 쓰는 게 적절하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서양의 언설에 너무 몰이 들어서 항상 영어나 다른 서구어의 표현이 원문이고 그걸 번역하는 일이 우리 몫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역사상의 한 시기로서의 '근대'와 자기가 살고 있는 시기로서의 '현대'를 '모던(modern)'이라는 하나의 낱말로 통칭하는 것은 저들의 어휘 부족일 뿐입니다. 그런 언어적 빈곤을 모르는 우리 동아시아인들이 자본주의 시대를 넘어선 새로운 시대를 '대안적 현대'로 표현하고, 이걸 영어로 어떻게 번역할지에 대한 고민은 영어권 인사들에게 맡겨 놓았으면 합니다.

따라서 저는 자본주의 근대에 적응하면서 그것을 극복해 가야 하는 우리 시대의 과제를 '대안적 근대의 추구'가 아닌 '근대 적응과 근대 극복의 이중 과제'라고 표현해 왔습니다. 딱히 그 표현을 쓰지 않더라도, 앞으로 다산 선생의 저작을 훨씬 깊고 넓게 공부해 오신 분들이 저의 이런 문제의식을 다소나마 수용하면서 연구와 토론을 해 나가셨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을 저는 품고 있습니다.

NGO칼럼



김다정
광주청년유니온 사무국장

지난 11월 13일은 전태일 열사 50주기였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몸에 불을 지르고 삶을 등진 그는, 청년이자 청계천 피복 노동자였다.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의 하청 노동자인 고 김용균 씨가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그의 죽음은 한국 사회에 안전하게 일할 권리라는 숙제를 남겼다. 그리고 2019년 1월 소위 '김용균법'이라고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는 위험 작업을 하청(도급) 업체에 떠넘기는 것에 큰 제약이 없고, 사고가 나도 원청 업체가 져야 할 책임을 가벼운 벌이 되어 일터의 노동자를 지키지 못했다. 김용균이 숨진 2018년 12월 11일부터 2019년 10월 30일까지 모두 523명이 작업장 사고로 숨졌다. 이나마도 과로·질병 등으로 사망한 노동자 수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다.

김용균법에는 김용균이 없었다. 이에 원청의 책임을 강력하게 묻고 처벌하며 산재 사망 사고뿐만 아니라 사회적 참사까지 재해의 범위를 넓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와 움직임이 이어졌다. 올해 5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동등본부가 설립되고 노동조합과 이에 동의하는 시민들은 각 지역본부를 설립하여 행

전태일 50주기, 50년이 남긴 과제

동하고 있다. 국회에선 정의당 강은미 의원(법안 대표 발의자)을 비롯한 의원들이 국회 로테터 홀에서 매일 1인시위를 하며 '노동자의 죽음을 멈추라' 외치고 있다.

그리고 지난 11월 13일 전태일 50주기를 맞아 문재인 대통령이 전태일에게 노동 분야 최초로 무궁화 훈장을 추서했다. 하지만 전태일은 그 훈장을 거부했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론으로 채택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최루탄이 쏟아지던 거리를 함께 활보하며 공장에 들어가 또 다른 전태일이 되고자 결의하던 그 열사들은 이제 금장으로 장식된 배지를 단 후 '나중에'라는 이름의 정치를 하고 있다.

174석이라는 과반 의석을 얻고도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민주화를 했다며 과거의 영예를 자랑하지만 그들은 2020년 일상의 민주화를 거스르는 '작은 전두환들'이 되어 하루 평균 6명의 노동자가 죽어 가는 이 현실을 방관하고 있다.

그러던 중 2020년 5월 광주 조순우에서 또 한 명의 청년 노동자가 사망했다. 파쇄기에 몸이 끼여 죽은 그 청년은 김재순. 그가 일하던 사업장에선 2014년 6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광주지방노동청의 관리 감독 부실로 4년 뒤 같은 곳에서 같은 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올해 8월에 광주글로벌모터스의 한 청소 노동자가 기계에 깔려 사망했다. 6월에 시산하기관인 광주시립극장에서 총체적 노동 인권침해가 일어났고 7월엔 또 같은 시 산하기관인 광주의료관광복지원센터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벌어졌다. 이것만 해도 그나마 언론을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난 사고일 뿐이다.

죽음이 지적에 넘쳤는데, 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노동자는 죽거나 다치는데 청와대와 여당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문재인 정권은 스스로를 '촛불 정부'라고 부른다. 2017년 한 권력자를 끌어내렸던 광장의 촛불은 일터·나이·성별·소득수준 앞에서 그만 멈추고 만다. 그들의 민주주의는 사회의 가장 낮고 약하고 가난한 곳을 비추지 않는다.

지난 10월 25일 이견희 삼성화장이 병환으로 사망했다. 10월 25일 그의 사망 당일 보도된 기사는 총 1245건이다. 김용균 노동자의 사망 당일인 12월 11일 당일 보도된 기사는 총 7건이다. 더 어린 나이에 더 처참하게 죽어야 뉴스에 한 줄이라도 실리는 사회가 대한민국이다. 죽음에도 자본의 가치를 매기는 이 사회는 그럼에도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가지면 온 우주가 도와준다고 말한다.

'청년 빙하기 시대'. 이는 밀레니얼 세대가 살아가는 2010년대를 일컫는 말이다. 20대의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이다. 전문가들은 청년 실업률이 급증하는 해에는 20~30대의 자살률도 늘어난다고 한다. 얼어 버린 청년, 방관하는 사회, 일을 해도 죽고 안 해도 죽는 사회. 2020년 많은 청년들이 각자 다른 형태로 전태일처럼 분신한다. 그들이 죽는 이유는 간단하다. 인간답게 살고 인간답게 일할 권리를 찾기 위함이다.

전태일 정신을 잇는 것은 훈장 추서가 아니다. 정부의 행동과 여당의 결단력으로 일터의 노동자를 보호할 강력한 법안 마련을 위한 행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21대 국회의 첫 번째 법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이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하자. 더 이상 방관하지 말자.

지역 낙후, 유일한 해법은 재정 분권이다

원에서 지방교부세를 인상이 필요한 이유다.

또 하나, 정부는 지방의 자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 분권'을 국정 과제로 설정해 추진해 왔다. 그러나 정부에서 추진한 1단계 재정 분권에는 지역 간 재정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이 전무하다. 균형 발전을 목표로 추진한 재정 분권이 오히려 지자체 간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하고, 지역 간 격차를 더욱 크게 만드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된다.

정부는 국제 대 지방세 비율을 8대2에서 7대3을 거쳐 최종적으로 6대4까지로 개선하기 위해 우선 2020년까지 지방소비세를 10%p 인상해 지방재정에 8.5조 원을 확충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방소비세 인상분 8.5조 원에는 지방으로 이양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 3.6조 원과 부가기초세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함에 따라 감소하게 되는 보통교부세 1.6조 원이 포함되어 있다. 실질적으로 지방에 돌아가는 순증액은 3.3조 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해 온 균특회계를 지방이양하면서 재원은 3년간만 한시적으로 보전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균특회계 보전 기한이 종료되면 이양 재원 3.6조 원은 소비지수 가중치를 적용해 17개 시도에 배분하게 된다. 균특회계를 지방이양하면서 재원은 3년간만 한시 보전하게 되면, 재정력이 낮은 전남을 비롯한 비수도권 자치단체는 대부분의 이양 사업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처럼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재정 분권 추진 방안이 나오게 된 이유는, 정부가 국제 대 지방세 비율 개선에만 치중하여 낙후 지역을 배려한 재정 조정 방안을 마

련하지 않은 데 있다. 이는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정책이 될 것이며, 지금까지 정부에서 밝혀 온 "어느 지역도 현 지방재정 제도보다 불리해지는 경우가 없도록 세심하게 제도를 설계한다"는 재정 분권의 기본 원칙(2018.10.30, 정부 합동 재정 분권 추진 방안)과도 맞지 않다. 이에 필자가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전국시도의회회장협의회는 지난 1월에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의 상생·변영을 위해 정부에 재정 분권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정부에 적극적인 검토와 개선을 요구한다.

지방 분권과 재정 분권이 오히려 지방자치단체 간 무한한 경쟁 시대를 불러오고 있다. 도민들의 창의적인 역량을 모아서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지역은 발전할 것이고, 구태와 관행에 휩싸인 지역은 나락으로 추락할 것이다. 지역 간에 엄청난 격차가 생긴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코로나19 사태에서도 확인할 바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국가 경쟁력이 튼튼해진 다. 그래야만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국민이 주인 되는 참여 자치가 실현된다. 지방분권, 재정 분권은 대세이다. 그리고 그것은 낙후된 전남에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 될 수 있다.

요즘 전남도의회는 올해와 내년도 전남의 살림살이를 살펴보며 동분서주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핵심 역할 중 하나인 도정과 교육 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면밀하게 심의를 하는 등 1년 중 가장 바쁘고 중요한 회기를 진행하고 있다. 지방분권은 물론 지방의회의 운영에도 200만 도민의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

社說

광주시, 난개발 막지는 못할망정 부추켜서야

광주에 사는 시민의 아파트 거주율은 65.5%나 된다. 계획도시인 세종시를 제외하고 전국 1위다. 광주시민은 '아파트 공화국'에 살고 있는 셈이다. 고층 아파트 난립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바람길을 막아 열섬현상을 초래하는 등 환경 문제의 주범으로 꼽히기도 한다.

광주시가 최근 평등 준공업 지역 일원 도시개발사업 민간 사업자 공모에 들어갔다. 민간 사업자를 끌어들이어 광산구 지족동에 친환경 자동차, 에너지, 문화콘텐츠 등 지역 전략 산업 거점을 조성, 직장과 주거가 함께 있는 공간을 만든다는 것이다.

해당 사업 부지는 국가 습지 지정이 추진되는 장륙습지와 황룡강과 인접해 있으며, 애초 도시기본·관리계획 등에서도 거론되지 않았던 곳이다. 더욱이 공동주택이 전체 면적의 3분의2를 차지하고 있어 최소 1만 세대 이상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상 광

주시가 '난개발'에 나선 것으로, 아파트 부지를 개발해 이익을 보장해 주고 친환경 자동차, 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등 전략 산업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받게 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광주시는 해당 사업에 논란이 일자 "간헐적·분산적으로 하다 보면 생기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효율적으로 개발 하자는 차원에서 민간 사업자를 공모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프로젝트를 제시해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거나 공익 차원에서 대기업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손쉬운 '아파트 개발 카드'로 건설 자본을 끌어들이려는 말초적 접근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아파트 난개발을 막아야 할 광주시가 오히려 직접 아파트 개발을 하겠다고 나선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시는 더 이상 공색한 변명을 할 게 아니라 이래라도 평등 도시개발사업 민간 사업자 공모를 당장 철회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 급속도로 확산 또다시 비상이다

광주 전남 지역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광주에선 처음으로 대학병원 내 의료진까지 확진 판정을 받았다. 'n차 감염'이 확산하면서 교도소·호프집·유흥주점에 이어 유치원까지 감염원이 되는 등 전파 경로도 다양하다. 더욱이 요즘엔 20~30대 청년들도 코로나를 비껴가지 못하고 있다.

광주에서는 어제 9명의 확진자가 또 발생했다. 이 중 5명은 병원 내 입주업체 직원, 의료진, 입원 환자의 보호자 등 전남대병원 관련 확진자다. 이로써 지난 13일이 병원 신종외과 의사가 처음 확진된 이후 현재까지 전남대병원 확진자는 14명으로 늘었다. 전남대병원은 현재 응급실이 폐쇄되고 신종외과 병동인 1층 6층과 감염내과 병동인 11층은 코호트 격리 조치됐다.

광주에선 특히다양한 경로를 통해 최근 일주일 사이 지역사회 감염 확진자가 40명을 넘어섰다. 전남에서도 신안은행 순천

연향지점 근무자 확진 이후 광양 소재 기업 등을 매개로 감염을 수 없이 확산돼 일주일 새 50여 명의 확진자가 생겨났다. 전국적으로 봐도 어제 신규 확진자 수가 200명대를 기록, 서울 연속 200명대를 이어갔다. 연이은 200명대 확진자는 코로나 확산세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은 어제 "현재 수증에서 사람 간의 접촉을 줄이지 않으면 2주나 4주 후에 1일 신규 확진자가 300명에서 400명 가까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 본부장의 경고가 아니더라도 검사 횟수가 대폭 줄어든 주말에 신규 확진자가 200명을 넘었다는 것은 그만큼 드러나지 않은 감염자가 많다는 의미이며, 향후 무서운 기세로 확산될 수 있음을 말해 준다.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격상을 통한 선제적 예방이 불가피해졌다. 시민 개인들이 마음을 다잡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명을 넘어섰다. 전남에서도 신안은행 순천

無等鼓

오래전 초경량항공기(UPL) 조종을 배우러 다닌 적이 있다. 알루미늄 뼈대에 전을 씌우고 엔진과 조정장치가 달린 2인승 레저용 항공기였다. 비행기는 일정 거리의 활주로를 주행하면 양력을 받아 절로 서서히 떠올랐다. 교관과 나란히 앉았지만 처음 조종간과 스티어링(엔진 실린더에 유입되는 연료와 공기의 양을 조절하는 장치)을 잡아야 할 때는 잔뜩 긴장해야 했다. 차츰 비행시간이 늘며 새처럼 하늘을 나는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었으나 IMF 한파가 닥치며 아

하늘을 나는 자동차

쉽게도 면허증을 취득하지는 못했다. 하늘을 날고자 하는 SF영화 속 공중 택시 는 언제쯤 실현될 수 있을까? 현대자동차, 한화 열망은 인간의 본능이기도 하다. 1997년 개봉된 SF영화 '제5원소'(감독, 픽 베송)에서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택시가 등장한다. 영화의 시간적 배경은 2259년이다. 지금과 비슷한 생김새의 택시들이 줄을 지어 도심 초고층 빌딩 숲 사이를 날아다닌다. 여주인공 '밀루'(밀라 요보비치)는 실험실을 탈출해 고층 건물에서 뛰어내린다. 그러나 마침 그 밑을 지나던 남 주인공 '코벤'(브루스 윌리스)이 모는 공중 택시에 추락하게 되면서 목숨을 구하게

점을 지냈다.

SF영화 속 공중 택시는 언제쯤 실현될 수 있을까? 현대자동차, 한화

열망은 인간의 본능이기도 하다. 1997년 개봉된 SF영화 '제5원소'(감독, 픽 베송)에서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택시가 등장한다. 영화의 시간적 배경은 2259년이다. 지금과 비슷한 생김새의 택시들이 줄을 지어 도심 초고층 빌딩 숲 사이를 날아다닌다. 여주인공 '밀루'(밀라 요보비치)는 실험실을 탈출해 고층 건물에서 뛰어내린다. 그러나 마침 그 밑을 지나던 남 주인공 '코벤'(브루스 윌리스)이 모는 공중 택시에 추락하게 되면서 목숨을 구하게

/송기동 문화2부장 song@

기고



김한중
전남도의회 의장

최근 들어 지방분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바람직한 지방분권의 방향은 무엇일까. 학계, 언론, 정치인, 시민 사회단체에서 관련된 많은 질문을 던져 온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달라진 것은 많다. 지방분권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방향을 두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바람직한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의 핵심 권한인 입법권과 재정권을 포함한 자율성을 지방정부에 넘겨주는 것이어야 한다. 특히 지방의 살림살이인 재정 분권이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지방재정 조정 제도를 통해 전남도를 포함한 낙후 지역의 재정난을 해소시키겠다고 했었다. 이는 현재의 국제와 지방세 비율을 개선시킨다는 것이다. 지역의 공익적 자산을 고려하는 재정 조정 제도가 시행되면 지역 실정에 맞는 발전과 삶의 질 중심의 지방자치를 활성화 시키게 될 것으로 본다. 더불어 농어촌으로 형성된 우리 지역의 낙후된 재정난을 해소할 수 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 한국판 뉴딜 추진 등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지방재정 부담도 한층 가중되고 있다. 이처럼 지방재정 악화의 주 요인은 지방행정 수요는 급증하는 데 반해 교부세 지원율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는 데 있다. 경제 위기 극복과 지방재정 강화 차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